



홈플러스
파산 위기
2, 3면

재한 이집트인 2명
난민 지위 인정
3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4, 5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수자원 강탈
6~7면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9면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11, 12면



홈플러스 대량해고 위기, 이재명 정부는 공기업화하라

이제 광장 농성이 아니라
일터 점거 농성이 필요하다

관련 기사 2~3면

홈플러스 파산 위기 일자리 보호 책임을 내팽개치고 있는 이재명 정부

강동훈

7월 3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홈플러스 청산과 대량 실직 가능성이 커졌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가 부채와 경영난을 이유로 2025년 3월 법원에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홈플러스가 14일 이내, 즉 7월 17일 까지 최소 운영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청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홈플러스는 2015년 MBK에 인수됐다. MBK는 인수 자금 7조 2,000억 원 가운데 4조 원을 홈플러스 명의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 결국 부채를 갚기 위해 점포 폐점과 자산 매각, 인력 감축이 이어졌고, 영업이익은 대부분 대출 이자로 지급됐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 존중”을 표방하면서도 일자리 보호에는 재정을 쓰려 하지 않는다

지난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점포 수와 직원 수는 더 빠르게 줄었다. 한때 120곳을 넘던 점포는 60여 곳 수

준으로 축소됐고, 직원 수도 희망퇴직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을 거치며 1만 1,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홈플러스 일자리 보호를 위한 진정한 대안

이처럼 홈플러스 파산과 대량 실직의 위기가 커지는 와중에 이재명 정부는 일자리 보호를 위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홈플러스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강 건너 불 구경만 하고 있다.

7월 3일 회생 절차 중단이 결정된 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라고는 임금이 밀린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고, 중소 협력업체에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것뿐이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부랴부랴 7일 국민연금을 방문해 MBK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MBK와 메리츠금융의 책임을 묻는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량 실직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청문회는 정부의 고용 보장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

게다가 민주당 지도부는 이 별 볼 일

없는 청문회 개최 요구조차 “야당 간사가 선임되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정무위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안은 정부가 홈플러스를 MBK에서 무상 몰수해 공기업화하라고 요구하며 싸우는 것이다.(관련 기사: ‘홈플러스 공기업화해 노동자 일자리 보호하라’, 본지 559호)

더구나 역대 정부가 홈플러스 사태에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의무도 있다. 10년 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국민연금이 6,000억 원을 투자하며 MBK를 도왔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MBK의 홈플러스 인수를 정책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공기업화 요구는 부도 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연 유일한 대안이다.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와 생계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

고, 그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능력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7.5퍼센트 인상된 약 65조 8,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윤석열 정부의 증액률보다 훨씬 높고, 2019년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한 액수다. 이대로 2035년까지 GDP의 3.5퍼센트 수준이 되면 국방비는 약 1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막대한 돈이 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군비 경쟁과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가.

게다가 올해 반도체 초호황으로 정부는 15조~2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초과 세수를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막상 대량 실직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데는 쓰지 않고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사회적 대화로 끌어들이는 데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초과 세수의 일부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

여기에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협력사들의 부도와 대량 실직 위험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홈플러스 납품 업체는 평균 7억 7,400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점 업체, 외주 인력 등 간접고용 노동자 8만~9만 명도 일자리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사모펀드식 경영으로 위험은 전부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지고 최대 주주인 MBK와 최대 대출자인 메리츠금융그룹 같은 금융회사들은 이윤을 챙겼다. 그런데 MBK와 메리츠금융은 회생 절차를 이어 나가기 위한 운영자금 2,000억 원을 조달하는 데 서로 책임만 떠넘기며 다투고 있다.

실사 이들이 2,000억 원을 조달하더라도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이 2,000억 원은 추가적인 점포 폐쇄와 노동자 정리해고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자를 지원하는 데에 사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이처럼, “노동 존중”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는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한국 자본주의 국가 위상 높이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야류 제국주의로의 도약을 꿈꾸는 이재명 정부’, 본지 592호)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공기업화로 일자리 보호를 위해 나서게 하려면 파업과 매장 점거로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 줘야 한다. 이는 투쟁의 초점을 형성함으로써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과의 단결을 확대하고, 다른 노동자들로부터의 연대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실제로 2007~2008년 홈플러스(홈플러스의 전신) 노동자들은 매장 점거 투쟁으로 정규직화를 얻어 낸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투쟁에서는 이런 저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 3면으로 이어짐

재한 이집트인 난민 2명, 난민 지위 인정

난민 스스로의 행동과 연대 운동의 값진 성과

7월 3일 재한 이집트인 2명이 난민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었다.

승소한 이집트인 난민들은 2013년 이집트 대중 항쟁을 짓밟은 군사 쿠데타와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활동가들이다. 당시 쿠데타를 주도한 장군 엘시시는 현재 10년 넘게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다.

이들은 엘시시 정권의 잔혹한 탄압을 피해 2018년 한국으로 왔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자 한국 정부에 자신들이 겪은 온갖 박해와 탄압, 귀국 시 직면할 위험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와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난민 심사를 맡은 법무부는 무려 6년이나 시간을 끌다가 2024년 8월 난민 지위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즉각 소송을 제기하며 항의했으나, 2025년 12월 1심 재판부도 법무부의 손을 들어 줬다.

심사와 소송이 8년 넘게 이어지면서 이들은 언제 강제 출국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일자리, 의료, 주거, 안전 등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이 모두 불안정했다.

이처럼 힘겨운 상황에서도 이들은 자유와 정의를 위한 운동을 멈추지 않



8년 넘는 고초 속에서도 자유와 정의를 위한 운동을 멈추지 않은 이집트 난민들

았다. 특히 2023년 10월 7일 직후 시작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들이 소송에 나서자 대의에 공감하는 변호사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송을 맡았다. 공익 변호사 단체 '어필'은 승소한 난민 중 1명의 2심을 무료로 변론했다.

연대 운동도 활발히 전개됐다. 연대자들은 재판부에 난민 인정을 촉구하

는 탄원 서명을 받고 소송 비용을 모금했다. 이 캠페인은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참가자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수천 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그 후에도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행동은 계속됐다. 난민들은 지난해 10월

부터 약 두 달 동안 대통령실 앞 집회를 시작으로 법무부 청사, 국회의사당,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앞 등에서 집회를 열었고, 서울 도심에서 두 차례 행진도 했다. 이들의 투쟁에 난민 지원 단체와 보건의료 단체 활동가, 진보적 종교인 등 다양한 이들이 연대하며 동참했다.

한국 정부는 난민에게 매우 배타적이다.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연평균 2.73퍼센트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는 1.75퍼센트로 더욱 낮아졌다. 이에 불복한 많은 난민이 소송을 제기하지만 승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난민 신청과 재신청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난민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관련 기사: 본지 579호 '민주당 김기표 의원 등이 난민법 개악안 발의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들이 스스로 벌인 운동과 연대를 통해 쟁취한 이번 난민 인정은 매우 값진 성과다. 난민 인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절대 상고하지 말아야 한다. 이집트인 난민들은 이미 너무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 왔다.

임준형

▶ 2면에서 이어짐

이재명 정부에 기대를 걸며 투쟁을 자제한 홈플러스노조

마트산업노동조합은 7월 3일 법원 결정 직후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정부의 긴급 개입을 촉구했다. "14일 안에 2,000억 원이 마련되지 못하면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로 향하게 된다." 또, 7월 15일에는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홈플러스노조 지도부는 현장 조합원들을 총력 동원하는 방식보다는 광화문광장에서 소규모 농성을 하며 정부의 개입을 촉구해 왔다.

이런 자기제한적 투쟁 방식은, 파업이나 점거 등으로 노동자들의 힘을 키우고 초점을 제공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이 정부의 선처를 바라며 수동적으로 기다리게 만들거나 각자 제 살 길

을 찾아가는 분위기를 조장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력은 계속 약화됐다. 그러는 사이 법정관리 기간에도 폐점과 해고는 계속됐다.

지금 민주노총(서비스연맹과 마트노조 포함한) 지도부도 노동자 투쟁을 키우기보다 정부 지원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홈플러스노조 지도부 등은 '현장에 동력이 없다'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간을 낭비하며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꺾어 먹어 온 것은 바로 노조 지도부였다.

그러나 일종의 악순환 상황을 만든 셈이고, 자기패배적 전략을 추구해 온 셈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홈플러스노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보당도 마찬가지다. "이सान이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민생을 어떻게 책임지고 하는지 확인할 준거점"이라고 비판했지만,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수감자도 아닌데 단식 농성을 하는 것은 전혀 불가피하지 않다). 노동조합 기구들에서 가장 큰 조직력을 갖춘 진보당은 기층으로 투쟁을 확대하기보다, 제도권을 통한 해결을 중시하면서 효과적

대안을 부담스러워해 회피하고 있다.

진보당과 마트노조 지도부 등 반미자주파들이 진정으로 노동자 투쟁을 발전시키려 하지 않는 근거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개혁을 성취하겠다는 민중전선 전략이 도사리고 있다. 이 전략은 계급을 초월한 연합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급진적이고 효과적인 노동자 투쟁과 거리를 두게 만든다.

이재명 정부가 일찍부터 기업 경쟁력과 '국력'과 국가 이익 강화를 중시하며 노동계급 삶의 문제는 뒷전인 상황에서 민중전선 전략은 일자리 보호 같은 노동계급 대중의 절박한 필요를 쟁취할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아류 제국주의로의 도약을 꿈꾸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는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AI 산업과 연관된 반도체, 로봇,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뜻한다.

청와대는 발표 전 "낮선 숫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부풀렸다. 삼성·SK 등 관련 기업들이 제시한 중장기 국내 투자 규모를 모두 합치면 최대 4,755조 원에 이른다. 전대미문의 규모 때문에 반도체 뉴딜이라는 용어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투자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며,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쇼'를 벌였다고 비판한다.

물론 단기적 이윤 획득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경쟁의 논리상 10년 뒤까지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이는 반도체에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기된 얼굴로 이 계획을 발표하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주요국의 정부와 자본가들은 AI가 자국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AI는 향후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자산으로 더욱더 여겨지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의 AI 능력 향상을 가로막기 위해 온갖 치졸한 짓도 마다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핵심 반도체 대기업 두 곳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덕분에 한국의 정부는 가까운 미래에 열강과 어깨를 견줄 만한 아류 제국주의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을 법하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의 전략 자원이 석유라면, 이제 반도체가 핵심 전략 자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천문학적 투자 계획에 양대 반도체 대기업은 흔쾌히 나섰다.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SK 최태원은 얼마 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공장을 지어야 할 수도 있다'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AI와 반도체는 석유 다음 가는 전략 자원이 됐다. 국가자본주의를 향하여

그날 이재명 대통령은 두 재벌 총수를 "국민 영웅"이라 부르며 90도 인사까지 했다.

“국민 영웅”?

그중 한 명인 최태원은 SK 재벌의 총수다. SK가 세계 1~2위를 다투는 재벌로 도약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5·18 학살 책임자이자 군사 독재 정권의 계승자인 노태우로부터 이동통신 사업권을 부여받았을 때다. 인수 자금이 포함됐을 비자금의 규모와 그 기여가 얼마나 되는지를 두고 지금 노태우의 딸과 이혼 소송 중이다.

다른 한 번은 비교적 최근의 반도체 산업 진출이다. 현대전자가 IMF 시절 LG반도체를 인수했다가, 10년 넘게 채권단 공동관리 하에 있던 것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SK가 인수했다. 2007~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의 여파가 여전한 시절이었지만, '아빠 찬스'인 이동통신 사업으로 20년 가까이 축적한 자본 덕에 가능했다.

다른 한 명인 이재용은 10년 전 박근혜에게 돈과 말(馬)로 로비를 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간 자다. 문재인이 풀어주고 윤석열이 사면했다. 이재용과 그의 아버지 이건희의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이재용의 할아버지 이병철은 해방 직후 미군정으로부터 적산(일본인 재산)과 원조자금 특혜를 받아 토대를 놓았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 선거를 돈으로 지원해 이후 처단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아빠의 아빠 찬스로 이재용은 "국민 영웅"까지 됐다.

이러니 아무리 역사와 정의(공정)를 외친다 한들 청년들에게 그것은 언제나 '개발'과 '발전' 뒤에 놓이는 후순위라는 얘기로 들릴 뿐이다. 더 나아가, 위선으로 여겨지고, 극우는 이를 파고 들어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4,755조 원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이 국익을 위한 실용주의적 선택이라고 포장할 것이다.

투자 규모가 부풀려졌고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는 뻔한 수작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를 불식시키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계획 곳곳에는 이 대통령이 노동자들에게 약속해 온 것과 정반대인 조처들이 담겼다.

7월 5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 협의에서 당정은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한 지원 입법을 연내 완료

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노사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 및 휴일근로, 연장·야간근로 규제 등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법에 포함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보도도 진작에 나왔다.

올해 1월 정부와 여당은 논란 끝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를 되돌리려 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 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는 두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처가 빼곡하다. 전력 과 용수 공급, 부지 확보, 인허가 패스트트랙,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대통령 주재 특별위원회, 비수도권 첨단산업에 유리한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 '초저리로 장기 임대 가능한' 공공지원 임대전용 산업단지 등이다. 로봇 분야에서는 정부가 앞장서 로봇을 선제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 주겠다고도 밝혔다.

얼마 전까지 반도체 호황으로 생겨나는 초과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던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호황이 가져올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메가프로젝트 지원에 주로 쓰기로 했다.

‘균형 발전’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 그리고 환경 파괴

‘메가프로젝트’가 가동하려면 전기와 물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6.3기가와트의 전력과 하루 65만 톤의 용수가 든다. 이는 대형 원전 4기를 넘어서는 설비용량이자, 국민 200만 명이 하루에 쓰는 수도물과 맞먹는 양이다(<뉴스1>). 용인 클러스터는 전력 15기가와트에 하루 용수 150만 톤이 필요하다. AI 데이터센터는 2035년까지 18.4기가와트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원전과 SMR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화석연료 발전원까지



이재명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은 이명박의 '원전 르네상스'와 닮은꼴이다

‘조화롭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내세워 한자리씩 차지한 현 정부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행동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에 반대하며 거리 시위까지 이끈 바 있다. 그런데 “안전하다면” 노후 핵발전소도 재가동해야 한다던 그의 정책은 이제 ‘핵발전 르네상스’를 외치던 이명박의 계획과 닮았다. 호남 특혜 논란과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에 따른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호남이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용수나 전력, 토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더는 전력과 용수를 구할 수 없어, 여력이 남은 호남을 택했다는 뜻이다. 결국 수십 년간 이어진 저개발의 결과로, 겨우 남은 물과 전기, 땅을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대기업에게 할값에 넘겨주겠다는 셈이다. 지난 7월 6일 청와대 민관합동점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속도전”을 강조했다. 같은 지역이라면 기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그대로 쓰고, 새로 하더라도 기간을 대폭 줄이라고 주문했다. 이는 윤석열이 핵발전소를 늘린 방식과 같다. 토지 확보에 대해서도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지시했다(파이낸셜뉴스). 환경영향평가와 협의 취득을 모두 ‘시간 낭비’로 취급한 셈이다.

온다던 미래는 오는가

이 모든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AI 거품 붕괴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AI 거품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말이 곧 이 분야에서 앞으로 이윤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거품이 꺼진다고 기술 자체가 폐기되는 것도 아니다. 과거 철도나 인터넷처럼 거품 붕괴를 겪은 뒤에도 장기간에 걸쳐 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호황 자체가 경제 위기를 향해 화약고를 쌓아 올리는 결과를 낳는다. 진취적인 자본가일수록 더 많은 화약을 쏘아 넣고 그 속으로 뛰어든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AI 데이터센터에 5조 5000억 달러가 투자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운다. 문제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빅테크 기업이 같은 전망을 보고 베팅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의 경쟁적 축적에는 이를 조율할 장치가 없다. 앞서 지적했듯, 투자가 늘어날 때도 그렇지만 특히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그 고통이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 문제다. 2007~2009년 미국발 경제 위기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았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AI 투자 패턴이 당시와 매우 유사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데이터센터 기업은 AI 빅테크에 공간을 임대해 돈을 벌고, AI 빅테크는 그 지분을 사거나 반도체 공급망에 투자한다. 결국 해당 산업 내부에서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이윤을 부풀리고 있는 셈이다. 위기가 현실화할 때 고통 전가에 맞설 노동자들의 능력은 지금부터 준비돼야 한다.

장호중

대구 이슬람 사원 겨냥 극우 현수막과 집회 무슬림 혐오에 맞서 연대하자

대구 이슬람 사원이 6년째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9월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가 시작된 이 건물은 2층 61평 규모의 작은 건축물이다. 이 정도 규모의 건물 하나가 일부 주민과 결탁한 개신교 극우의 반대와, 이를 명분으로 한 대구 북구청의 방해로 장기간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2022년 9월 북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개신교 극우 세력이 공사를 계속 방해했고, 지난해 12월 북구청 건축위원회는 안전성을 이유로 또다시 재검토 결정을 내려 공사는 여전히 멈춰 있다.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은 오는 7월 중 북구청의 지적 사항을 보완한 건축 허가 변경 신청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 22일, 이슬람 사원과 가까운 경북대학교 북문 인근에 무슬림을 겨냥한 혐오 현수막이 자유통일당 명의로 걸렸다. ‘할랄이 들어오면 테러범도 들어온다’, ‘이슬람문화는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다’ 같은 내용이다. 현수막이 걸린 곳에서 지난달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집회도 열리고 있다. <<경향신문>> 7월 7일 자 보도)

‘대구 이슬람 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6월 22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현수막을 “명백한 위법 광고물이자 증오를 선동하는 폭력”이라며 즉각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반대 단체가 집회 신고를 해 둔 상태라 신고 기간 동안은 철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도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으며 사실상 현수막을 방치했다.

이번 현수막 게시는 지방선거 이후 극우가 선관위 사태를 둘러싼 대중의 불신을 틈타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며 다시 기세를 올리는 국면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로 3선을 지낸 전임 북구청장에 이어

새 북구청장이 취임했고, 홍준표 사퇴 이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돼 온 대구시장 자리에도 추경호가 새로 취임했다. 개신교 극우 세력이 새 시장·구청장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홍준표는 대구시장 재임 중 이 문제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사원 건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광훈 세력과 선을 그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홍준표도 이슬람 혐오에 영합한 바 있는 우파 정치인이지만, 무슬림 국가 기업들과의 경제 교류와 중도층 표를 의식한 것이었다.

반면 새로 취임한 추경호는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공범이다. 개신교 극우로서는 이번 기회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완전히 저지하려고 마음먹었을 법하다.

공사 방해가 시작된 2020년 당시 경북대에서 공부하던 무슬림 유학생의 상당수는 이미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 사이 남아 있던, 또 새로 온 무슬림들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 편히 기도할 공간조차 없이 혐오와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이 문제는 사소한 지역 갈등이 아니라, 무슬림 혐오의 문제다. 국제적으로 무슬림 혐오는 극우가 즐겨 동원해 온 인종차별의 하나고, 그 결과는 2019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총격 같은 극우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국의 극우는 현재 부정선거 음모론과 혐종 등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번 대구 현수막 게시는 기회가 있다면 무슬림 혐오도 세력 결집과 운동 건설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할 것임을 보여 준다. 대구의 현수막을 ‘어차피 별 세력 없는 소수 극우의 소동’으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무슬림 이주민·유학생들과 연대해야 한다.

김동욱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수자원 강탈 — 또 다른 인종학살 수단

커밀라오일

지난 2년 반 동안 계속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잔혹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폭격이 남긴 참혹한 폐허, 차가운 천막으로 내몰린 피란민들의 고난을 우리는 화면을 통해 접한다.

‘인종학살’이라고 하면 흔히 대량 학살이나 신체적 상해를 떠올린다.

하지만 인종학살은 다차원적인 과정이다. 유엔에 따르면 인종학살은 “특정 집단을 물리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기 위해 그 집단의 생활 조건을 고의로 악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스라엘은 모든 생명체에 필수적인 물을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체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알 바이츠만이 저서 《뿌리째 없애기》에서 밝혔듯,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초토화하려 한다. 한때 농장이나 집이 있던 곳을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이다.

“가자지구의 생존자들은 살인 드론과 폭격기가 쉴 새 없이 웅웅대는 가운데 끝없는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며 연명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겪는 극심한 물 부족은 중동 사막 지역의 자연환경 탓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물을 체계적으로 무기화한 결과다.

신화

예루살렘의 강수량은 베를린과 비슷하다. 이스라엘 건국 이전에 팔레스타인 농민들은 올리브, 감귤류, 수박, 오이, 곡물 등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출도 할 수 있었다. 토지가 비옥했고 관개도 이뤄질 수 있었다.

강수량이 비교적 적은 팔레스타인 남부에서도 농민들은 환경에 적응했다. 가문 해에는 밀 농사를 짓지 못하더라도, 건조한 환경을 더 잘 견디는 보리를 재배했다.

하지만 인종차별적 편견에 사로잡힌 식민들은 팔레스타인 남부가 불모지이고 개명된 유럽인들에 의해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사막을 기름진 땅으로 만

들었다”는 관념이 대중의 의식에 스며들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물을 사용했다. 20세기 내내 시온주의 정착자들에게 가뭄은 불안의 원천이었다. 농업에 막대한 수자원을 소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은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이뤄 냈다. 이제 이스라엘은 수자원 관리의 세계적 선두 주자를 자처한다. 특히 해수 담수화 시설과 거대한 국가상수관망을 자랑거리로 내세운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물 위기에 시달리는 주변국들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이스라엘은 담수 생산량이 풍부해져 주변국에 수출까지 하기 시작했다.

2014년 이스라엘 신문 〈하아레츠〉의 한 기사는 이렇게 주장했다. “생활용수든 농업용수든 필요한 물을 모두 생산하는 능력은 머지않아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평화를 앞당길지도 모른다.”

이스라엘은 요르단에 담수를 수출하고 그 대가로 태양 에너지를 수입했다. 이는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이스라엘의 “물 기적” 운운하는 멋들어진 홍보 영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기술자들은 기후 붕괴를 기술 혁신과 금융 투자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로 이해하게 됐다. 그러나 물 공급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물 공급을 부당하게 틀어쥐고 있다는 문제를 건너뛴 채 해결될 수 없다.

언론인 살렛 실버가 지적하듯, 우리는 이스라엘의 수자원 관리 능력이 우월하다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은 ‘수자원 문제’를 겪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서 물을 강탈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지하수원인 산악 대수층을 통제한다. 이 수원의 대부분은 서안지구 땅 밑에 있다. 이스라엘은 점령지의 자원을 갈취하면서 그곳에서 물을 과도하게 추출한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걸쳐 있는 해안 지하수층의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 이스라엘은 와디 가자 강의 물길을 틀어 가자지구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한다. 이는 요르단강의 유량을 크게 줄였다.

강탈

서안지구의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 국영 수도 기업 메코르트에게서 물을 구입해야 한다. 여름이 되면 메코르트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서안지구 급수량을 줄인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사막으로 내모는 판국에, 이스라엘이 사막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헛소리다.

기후 붕괴 때문에 기온이 오르면 가뭄도 심해진다. 주기적인 폭우가 이 지역을 강타하기도 할 것이다.

기상이변은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타격을 주겠지만, 이스라엘인들은 팔레스타인인들보다 이에 대처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물 이용을 가로막는 동안 이스라엘인들은 텔아비브의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고 국립공원 오아시스에 조성된 우거진 녹지에서 일상을 탈출한다.

그러는 동안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있다.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의 90퍼센트 이상이 물 부족에 대처하고자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해 놓았다.

2024년 가자지구 데이르알발라 주민들은 태양력을 이용해 물을 걷기 시작했다. 연료 부족으로 해수 담수화 시설의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물 갈취에 맞서는 이러한 일상에서의 저항은 칭송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지속성 있는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 빼앗긴 땅으로 귀환할 권리를 쟁취하고, 이스라엘의 점령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의 물 이용을 체계적으로 방해해 왔다. 시온주의자들에 의해 파괴된 서안지구의 관개 시설



사진 출처 UNICEF / UN1845957 / Nateel

식수 배급소에 줄을 선 가자지구의 아이들

가자지구 수도 시설의 90퍼센트가 파괴되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에서 휴전이 발효돼 불안정하게 이어진 지난 7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을 죽였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은 서서히 가해지는 형태의 폭력에도 직면하고 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유엔 난민구호기구(UNRWA)에 따르면 가자지구 수도·정화 시설의 약 90퍼센트가 완파되거나 파손됐다. 이스라엘은 수도관을 거듭 폭격했다.

이스라엘의 통제 탓에, 파괴된 기반 시설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부품과 장비를 반입하기가 어렵다. 철강과 시멘트는 군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이 반입을 일절 금지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설정한 ‘황색선’의 동쪽, 즉 가자지구 전체 면적의 64퍼센트에 이르는 땅에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고 있다. 그 지역의 파손된 수도관은 보수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해수 담수화 시설에 필요한 전력 공급망까지 파괴됐다.

이로 인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 대다수가 급수차에 의존하는 처지다.

칸유니스에 사는 오마르 사아다 씨는 이렇게 전했다. “급수차 물을 받으려면 새벽 6시부터 서둘러야 해요. 이전에는 아침부터 이른 오후

까지 물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두 시간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물이 오염돼 장염이나 복통에 시달릴 때도 있지만, 구할 수 있는 물이 그것뿐이라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해요.”

이스라엘은 국영 수도 기업 메코로트가 송수관을 통해 가자지구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수도 기술자와 급수차 운전자를 표적 공격한다.

올해 4월 유니세프(UNICEF)는 이스라엘이 트럭 운전자 두 명을 폭격해 살해하자 가자지구에서 활동을 중단했다.

그 운전자들은 가자지구 북부 알만수라 급수차 상차 시설에서 물을 채우고 있었다. 그곳은 메코로트의 가자시티 수도망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인 급수차 상차 시설이었다. 알만수라에서 물을 채운 급수차에 의존하는 가자시티 주민들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자지구의 위생 위기는 더 악화될 것이다. 100만 명이 넘는 피란민이 하수도 시설이 없는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다.

급수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로 목을 축일지, 밥을 지을지, 몸을 씻을지 선택해야 한다. 상처를 씻지 못해 감염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여성들이 생리나 출산 후 사용할 물도 부족한 실정이다.

서안지구 수도 시설을 공격하는 정착자들

올해 1월 서안지구 아인 사미아 정착촌 인근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수도관을 망치로 부수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다.

2월에는 복면을 쓴 정착민들이 아인 사미아의 급수 시설을 기습해 수도관과 계량 장비를 파손했다. 노동자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 그 공격으로 물 공급이 12시간 동안 중단됐다.

예루살렘 수도공사의 무함마드 아부야야시 수도 운영 책임자는 양수장을 겨냥한 이 같은 공격이 올해 1~4월에만 열 차례나 있었다고 CNN에 전했다.

2023년 이후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 정착자들의 갈수록 거세지는 공격에 시달려 왔다.

이스라엘 정착자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살던 땅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수도 시설을 집중 공격했다.

물 관련 분쟁을 조사하는 싱크탱크 퍼시픽연구소에 따르면, 이스라엘군과 정착자들은 최근 5년간 팔레스타인의 수원을 250차례나 공격했다.

1948년 ‘나크바(대재앙)’ 때부터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시온주의 정착자들이 우물에 더러운 기저귀나 죽은 닭을 던져 넣어 독을 푸는 일이 빈번했다.

팔레스타인 농민 무함마드 사와프타 씨는 요르단계곡의 팔레스타인인 마을 바르달라 출신이다. 바르달라는 지난해 이스라

엘 재무장관 베잘랄 스모트리치가 합병 대상으로 지목한 광활한 지역에 포함돼 있다.

사와프타 씨는 태양광 패널로 가동하는 펌프로 우물물을 길어 경작지에 데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 우물과 경작지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 이스라엘 정착자들이 울타리를 쳐서 막아 놓았기 때문이다.

“우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물에 가려고 하면 그들이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왜 제 땅에서 제가 떠나고 저들이 남아 농사를 짓는 거죠?

“30년의 꿈과 피땀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어요. 농사짓고 가축을 키우고 마시는 데 쓸 물은 목숨줄입니다. 물이 없으면 목숨도 없어요.”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법과 국제법에 저촉되는 이러한 공격을 저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공격에 가담하고 있다.

이스라엘 인권 단체 베첼렘에 따르면,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물 이용을 차단하는 것은 고의적이고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정책이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서 얼마 남지 않은 재산과 토지를 갈취하고 가능한 한 많은 영토를 차지해 정착 프로젝트와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한 강탈을 지속하려는 것이다.”

출처 Camilla Royle, 'How Israel weaponises Palestine's water supply' (2026. 7. 5) / 번역 김준호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서울 서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AI, 성장의 새로운 견인차인가 거품인가?

일시 7월15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한빛빌딩 A동 2층 강의실60(홍대입구역 4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강동훈 <노동자 연대> 경제 담당 기자

참가비 4,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8074-2793 / s-west@ws.or.kr

서울 동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AI, 성장의 새로운 견인차인가 거품인가?

일시 7월16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바인그룹 빌딩 10층 1004호 (신설동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분)

발제 강동훈 <노동자 연대> 경제 담당 기자

참가비 5,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동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5731-7299 / s-east@ws.or.kr

부산/울산

젠더는 무엇이고, 왜 새로운 전장이 됐나?

일시 7월19일(일) 오후 3시 장소 부산 하이텐 스테디룸 3층 a-sm강의실 (서면역 2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성지현 <노동자 연대> 기자

참가비 5,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부산/울산 지역 모임들 문의 010-8028-8029 / busan-ulsan@ws.or.kr

전북교육청이 윤석열 구속 촉구 투쟁을 한 교사를 징계하려 한다

지방선거는 정부가 진심으로 내란 청산, 즉 쿠데타 지지 세력 숙청에 나서지 않은 결과를 보여 준다. '내란 청산'은 가다 서다 하며 지지부진했고, '사회 개혁'은 턱없이 미흡하거나 배신으로 귀결돼 사람들은 내란 정당 국힘 반대 프레임에서 진정성을 충분히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선거용 구호로 느낄 만했다. 그 때문에 내란 옹호자들이 광역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다.

그런 와중에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 촉구 시위를 벌인 현직 교사를 징계하려 한다. 이 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지난해 한남동 앞 도로 점거 시위로 일반교통방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교사 품위 위반으로 삼아 징계하려는 것이다. 전북교육감은 지난해부터 공석이었는데, 대행 체제에서 지난달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내란 청산의 진척은 커녕 백래시가 벌어지는 셈이다.

그런데 7월 1일 취임한 천호성 진보 교육감은 취임 후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신임 교육감은 교육 관료들의 눈치를 보는 듯하다. 일단 징계에 절대 반대한다는 메시지를부터 내놓아야 마땅하다.

어쨌거나 이런 꼴까지 보게 되면, 지방선거를 통한 내란 청산론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김문성



7·11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 초과 세수를 공무원 임금 인상에 사용하라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7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송례문 일대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가 열린다. 노동자 2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 불만이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공무원 노조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황으로 올해 초과 세수가 많이 걷히는 만큼, 이를 공무원 임금 인상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 임금을 억눌러 왔는데 올해는 그럴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100인 이상 민간 기업 대비 2020년 90.5퍼센트에서 2024년에는 83.9퍼센트로 하락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여파 등으로 물가는 급등했는데 공무원의 보수는 거의 동결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들은 2027년 임금 7.1퍼센트 인상, 정액급식비(월 4만 원)와 직급보조비(월 3만 5,000원) 인상, 시간외근무수당 감액 조정률(55~60퍼센트) 폐지, 정근수당 10퍼센트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37년을 근무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고등학생보다 적은 현실”, “밤새워 일하고 받은 돈이 고작 4만 5,000원 정도”라며 성토했고 있다.

게다가 미래 임금인 공무원연금은 박근혜 정부 때 개약으로 지급 개시 연령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지게 해 놓아서, 2022년 퇴직자부터는 소득 공백이 생겨났다.

노조들은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 상당수는 정년 연장을 찬성한다. 퇴직 후 연금 수급 때까지 삶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더 늙을 때까지 일하는 게 진정한 대안은 아니다. 일본은 2031년까지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고 하고, 독일 정부는 최근 퇴직 연령을 현행 67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세계 각국은 노동자들을 더 늦게까지 일 시키려고 안달이다. 그래야 정부의 연금 지급 부담을 줄이고 저렴한 노동력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려면 연금 수급 연령을 앞당기고 충분한 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투쟁이 발전해야 한다.

그 외에도 정치 기본권 보장, 안전

하게 일할 권리 등이 주요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밴드에 정치적인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직되거나 기소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례는 기본적인 시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공무상 심혈관 질환 요양 건수도 크게 늘고 있고(2021년 56건, 2022년 71건, 2024년 97건),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례도 139건(2020년~2024년)에 달했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요구는 자신들의 생존 조건을 결정하는 투쟁이므로 당연하고도 정당한 권리이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동자들이 대규모 성과급을 따 내자 공무원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실질임금 회복을 위해 올해에는 임금 인상을 꼭 쟁취해야 한다는 바람이 크다. 그러려면 7월 11일 집회가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투쟁이 준비되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열리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일회성 집회는 무시하고 마음대로 임금을 정해 왔다.

올해 곳곳에서 일어나는 임금 인상 투쟁에 발맞춰 공무원 노동자들도 요구 사항을 쟁취할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에 나서자.



경기 기간제 사서교사 투쟁 승리하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경기도의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들의 투쟁이 1차 승리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원 경력 인정, 삭감된 임금 소급 지급 등의 약속을 받아 냈다. 이에 7월 1일 '교원+사서' 교원 경력 인정 대책위(이하 공대위)는 경기도교육청 천막

농성을 중단했다.

'교원+사서' 기간제 교사들은 2019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사서교사로 채용돼 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했다. 2019년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독서 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려 했다. 그러나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사서교사

자격을 완화해 '유초중등 교원 자격증과 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사서교사로 채용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 덕분에 오지로 불리는 지역이나 그동안 사서,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던 학교에 이들이 배치돼 학교 도서관 및 독서 교육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 9면으로 이어짐



이재명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미국 패권 위기 틈새를 노려 유럽 열강 틈새에 끼려 하기

김중환

7월 7~8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한다.

나토 정상회의는 미국이 유럽과 안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비유럽 나토 회원국인 캐나다도 편의상 '유럽'에 포함하겠다.)

유럽은 미국과는 독자적인 제국주의 세력이다. 지난 1년 동안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전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뒷배 역할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왔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하고 있고 그 결과 유럽으로의 확산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자행하는 인종학살의 주요 지원국이며, 중동과 아프리카의 옛 식민지에서 직접 행사하는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하다. 이란 전쟁 동안 유럽이 제공한 군 기지에서 미군 전투기들이 출격한 횟수도 5,000회에 달한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집단 서방'은 미국 중심 제국주의 질서를 지키는 데서 이해관계를 같이 해 왔다. 그러나 최근 그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집단 서방' 내 균열도 커져 왔다.

특히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 빠려는 것을 보며 유럽 권력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또한 트럼프는 유럽 권력자들을 박대하며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그들을 압박했다. 결국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10년 안에 국내총생산(GDP)의 5퍼센트로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기존 목표치였던 2퍼센트도 오랫동안 달성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극도로 가파른 인상이다.

지난 1년 동안 유럽 국가들은 실

제로 국방비 지출을 전년 대비 무려 20퍼센트나 늘리며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징병제까지 부활시키고 있다.

유럽 동맹국들이 트럼프의 안보 분담 요구에 응하는 것은 자신들도 재무장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과 유럽 간의 골은 지난 1년간 깊어졌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차지하려고 하고,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종전하는 것을 강요하며, 지난 2월 말 이란 침공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등의 일들을 겪으며 유럽 권력자들은 과거만큼 미국을 신뢰하지 않게 됐다.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의 이란전 협조 요구에 사실상 불응했고, 일부 국가들은 영공 사용을 제한했다.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맞서 보복 관세를 검

토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유럽의 유력한 안보 인사는 "마침내 유럽이 미국이 바라던 [군사력을 갖춘] 동맹으로 바뀌고 있지만, 정작 둘은 더 멀어지는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도 트럼프는 미국이 나토 비용을 떠안고 있다며 동맹국들을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또한 유럽 국가들이 이란과의 전쟁에 기대만큼 협력하지 않은 것에 또다시 불만을 터뜨리며 "돈보다 충성"을 요구했다.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은 재무장에 필요한 무기를 대거 미국산으로 구매해 트럼프를 달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하도록 미국을 견인하는 데에 매달릴 것이다.

이재명의 참석 의도

이런 회의에 이재명이 참석하는 목적은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 서방'의 일원임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야당 시절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의 서방 제국주의 지지 일변도 노선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 바 있다.

"전쟁에서 최대한 비켜서 있어야 한다. 동네일에 깊이 끼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랬던 이재명이 집권 1년여 만에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실 취임 이래 이재명은 서방 제국

주의에 밀착하는 행보를 걸어 왔다. 지난해에는 트럼프 앞에서 한국이 "중국과 북한 잠수함" 견제에 앞장서겠다며 아부했고, 올해 한·EU 정상회담 선언문에는 러시아 규탄과 중국 견제 내용을 담았다. 이번 나토 회의 참석도 그 연장선에 있다.

게다가 미국은 나토의 안보 지평을 아시아·태평양으로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시키려 해 왔는데, 이번 참석은 거기에 호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친서방 노선이 단순한 미국 추종은 아니다. 이재명의 이번 나토 회의 참석은 한미동맹과 별개로 유럽 제국주의

와도 관계를 다지려는 목적도 있는 것이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했을 때에도 이재명 정부는 호응도 거부도 하지 않은 채 유럽과 보조를 맞추는 길을 택한 바 있다.

유럽과의 이런 보조 맞추기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제국주의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주의 국가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대상과 시장 다변화인 것이지, 제국주의에 도전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유럽 권력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우크라이나를 앞세운 러시아와의 대리전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나토 회의 참석은 '방산 수출 외교' 목적도 크다.

그러나 '죽음의 상인' 행동은 위험천만한 제국주의 대리전에 더 깊숙이 관여하는 과정일 수 있다.

반(反)제국주의 좌파가 취하지 말아야 할 태도는 침묵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산 수출을 위해 자주외교를 놓치면 안 된다'고 조언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제국주의 질서의(부차적이지만) 일원으로서 의식적("자주적")으로 한반도를 제국주의 경쟁에 더 깊숙히 밀어넣고 있음을 폭로해야 한다.

또한 애국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국익을 논박하고, 반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제국주의에 맞서는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 8면에서 이어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안내를 받고서, 지난 2024년 3월부터 이들을 무자격자로 분류해 채용을 금지했다. 지난 5년 동안 근무한 교사 경력도 오류였다며 지방자치단체 근무 경력으로 변경해 경력의 50퍼센트를 삭감했다. 이는 경력 삭감에 따른 호

봉 정정과 임금 환수로 이어질 것이기에 해당 교사들에게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다.

해당 교사들은 지난 2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의 부당한 행정에 항의하며 저항했다. 공대위를 만들어 규탄집회, 기자회견, 1인 시위, 천막농성 등을 벌이며 꾸준히 투쟁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을 '취업사기'라고 규탄하고 원래대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안민석 신임 교육감이 공대위의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해결에 나선 것도 바로 공대위의 투쟁 덕분이다.

천막 농성 중단은 투쟁의 끝이 아니다. 안민석 교육감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간제교사들은

다시 싸움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부당함에 맞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싸우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기간제교사들이 겪고 있는 여러 차별 폐지를 위한 정규직화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베네수엘라 현지 사회주의자 인터뷰

“위기의 배경에는 제재와 정부의 부패와 무능이 있습니다”

지난 주 연쇄 강진의 여파 속에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텔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 정권에 분노하고 있다.

지진 후 베네수엘라는 거의 매일 밤 전기가 끊기고, 공공 기반시설이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 체계 붕괴와 시신의 부패로 전염병이 창궐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권은 구조 작업에 자원하려면 허가증을 발급받으라고 한다. 그 때문에 구조 작업에 자원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느라 잔해에 깔린 사람들을 구조하고 피해 지역에서 잔해를 치우는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지진이 일어난 라과이라주(州)는 군

대가 통제하고 있다. 의사들과 구조대원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텔시 로드리게스는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가 제국주의적 침략을 감행해 당시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납치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마두로는 전임자 고(故) 우고 차베스가 대변했던 변화 연원을 오래 전에 배신했고 신자유주의, 긴축, 탄압 정책을 펴왔다.

로드리게스와 정권 내 일부는 미국의 협조자가 되는 대가로 권좌를 부지하는 거래를 했다.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자 조니 알베르토 알라르콘 푸엔테스에게 현 상황에 관해 물어 봤다.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이 재난의 피해를 키웠다

정부는 지진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정부의 대응은 매우 뒤늦었습니다. 지진 대응에 필요한 기술도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난이 벌어진 직후 24시간 동안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초기 대응에 나서서 이재민·부상자·사망자를 위해 당장 필요한 도움을 준 것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사회, 노동자, 생존자, 재난을 용케 피한 이웃 등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24시간 동안 베네수엘라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이 보여 준 지원과 역량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이재민들에게 막대하고 결정적인 조력을 제공했어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지원 부족 때문에 상당한 시위가 있었어요.

지진 48시간 후 국가는 장비를 제공하고 민방위 병력을 투입하는 등 지원을 제공하긴 했습니다. 소방관들과 구호팀을 투입했죠. 이후 여러 나라에서 구호가 왔습니다.

지원이 아예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뒤늦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위의 배경이었습니다.

보안 병력을 겨냥한 시위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병력들은 구호가 아니라 약탈을 하러 재난 지역에 투입됐습니

다. 돈이든 귀중품이든 훔칠 수 있는 것은 죄다 찾아 가져가려 했어요.

때로는 시민사회가 나서서 그런 약탈과 도둑질을 가로막았습니다. 경찰과 국민방위군 등 보안 병력이 약탈을 한다는 보도가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각되고 촬영된 후 많은 병력이 임무 해제됐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 넘게 경제 위기를 감내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두드러진 위기였습니다. 그 결과 병원, 민간인 보호 기관, 소방서의 장비가 열악합니다. 설비나 기술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 자연 재난에 대응할 역량이 크게 모자랐습니다.

이번 위기는 부패와 잘못된 정부 정책 탓도 있지만, 미국이 베네수엘라인들과 베네수엘라 사회에 가한 제재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제재 탓인 것은 아닙니다. 부패가 극심하고 공적 자금이 줄 줄 새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쓸데없는 사업이나 보안군의 무기 — 주되게는 탄압을 위한 것이죠 — 에 낭비됩니다.

병원에는 물자와 인력이 부족하고 기반 시설과 구급차도 모자랍니다. 이 때문에 자연 재해의 타격이 훨씬 심해졌습니다. 재해에 대처하고 인명을 구조할 전략을 수립할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얼마나 깊은가요?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첫째, 저임금 때문에 경제 위기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사실 기본급이라는 게 없고, 그 대신 포괄적 수당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급은 1달러도 채 되지 않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받는데, 이 수당은 휴가 수당이나 사회 보장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의료보험 보장도 해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도, 신기술을 익힐 수도, 직업 훈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위기의 또 다른 측면은 수도 카라카스와 라과이라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것입니다. 공공 시설, 병원, 학교, 체육 시설, 관광지 등 많은 건물들이 붕괴했습니다.

5만 채 넘는 건물이 붕괴됐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위기를 악화시킵니다. 이 지역의 위생 상태는 열악하기 그지없는데, 적절한 구조 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큼니다. 시신이 이미 부패하는 중입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방출되고 있을 테고, 그 지역에서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를 미국이 감독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조처든 그 명령은 트럼프와 트럼프의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에게서 옵니다. 확실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율성도 자주성도 없죠.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만연해 있습니다.

마두로와 텔시 로드리게스에 대한 불만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도 불만을 사고 있는데, 전망·제안·의제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공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텔시 로드리게스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제시합니다. 가혹한 신자유주의의 한 형태를 추구하고 미국의 후견을 받는 것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베네수엘라인들에게는 더 광범하고 진보적인 전망을 쟁취할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투쟁을 하고 있죠.

우리는 진짜로 독립과 자결권, 사회적 평등을 지키고 삶의 조건을 개선할 대안을 바랍니다.

인터뷰·정리 레베카 기번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임금 차별 폐지와 함께 고용 보장 요구도 지지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시작된 투쟁이 베트남인 노동자 등으로 확대되자 사용자 측은 그동안 부당하게 공제해 온 밥값을 환급하겠다는 등의 미온적인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곧 이어 사용자 측은 식비 환급비를 현금 이 아닌 지역상품권 울산페이로 주겠다고 밝혀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국에 송금하지 말고 지역에서 쓰라는 것이다.

7월 5일 집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미온적 양보에 만족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개악 철회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이 완강한 투쟁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냈다.

그간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은 밥값 차별뿐 아니라 하청 이주노동자들도 받는 성과급조차 받지 못해 왔다.

또한 고용 불안에도 시달려 왔다. 이미 지난해 100여 명의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가 계약 해지(해고)됐다. 그래서 그간 집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임금 불만뿐 아니라 “재계약 보장”도 중요하게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지부의 현 집행부를 배출한 중앙과 경향의 조직이 포함된 ‘HD현대현장조직연대회의’는 내국인 노동자의 정규직 채용을



이주노동자 재계약 보장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

늘려야 한다면서 직고용 이주노동자 고용 중단을 요구했다(7월 3일 발행한 소식지). HD현대그룹이 올해 2월 언론 발표를 통해 계약 기간이 끝난 이주노동자들을 “내국인으로 우선 대체”하기로 했으니, HD현대삼호에서도 직고용 이주노동자 확대를 멈추라는 것이다.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배신한 것이다.

이런 입장은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사실 현대중공업 노조 지도부와 기회주의적 좌파는 조선업 이주노동자 추가 유입을 반대

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지난해 초 금속노조 조선분과와 현대중공업지부 등이 포함된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조선업 이주노동자 추가 유입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과 기자회견을 했다. 이주노동자 유입이 내국인 노동자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말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책임은 체제와 사용자에게 있는데, 이주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잘못된 입장이었다.

7월 5일 집회에서 기존의 “재계약 보장” 요구가 빠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 12면에서 이어짐

도록 만드는 것이 단결을 강화하는 방안 아니겠는가.

또한 이주노동자에게 단협이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입을 거부하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 함께 투쟁해 단협 적용을 확대하고 상향평준화를 이를 과제로 삼아야 한다. 오히려 노조는 단협 미적용으로 생기는 박탈감을 우려한다면서 정규직 노조 가입을 거부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직접 박탈감을 준 것이다.

물론 조직 가입 형태가 노동자들의 단결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현중노조 집행부가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을 하청지회에 가입하게 한 것은 이주노동자를 위해 때때로 집회를 주최할지언정 같은 노조로는 조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요구와 전투성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주노동자 직고용 중단” 요구는 노동자 단결을 해칠 뿐이다

7월 3일 HD현대현장조직연대회의는 “이주노동자 직고용 중단”을 요구했다. ‘나쁜 계약 철회’, ‘재계약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이주노동

자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그런데 HD현대현장조직연대회의는 현중지부의 현 집행부를 배출한 분과동지연대회의와 전진하는노동자회가 포함돼 있다(나머지는 합병 전 현대미포조선의 함께하는 동지회, 삼호중공업의 단결의 힘).

이들은 정주노동자의 정규직 채용을 늘려야 한다면서 직고용 이주노동자 고용 중단을 요구했다. 생산직 정규직 신규 채용이 안 되는 게 직고용 이주노동자 탓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진실 호도다. 조선업 사용자들이 정규직 채용을 줄이

고 자리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FREE JOB CHANGE)이 들어갔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의 당면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지지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원칙이나 전략적 목표로 대체한 것이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등 노동조합 집행부와 좌파 조직들이 공동 주최했다.

또,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하기를 원했지만 현대중공업지부 집행부가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하청노조에 가입했다.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동일한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노조에 소속돼 싸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지부 집행부는 일회성 집회를 공동 주최하면서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한다는 이미지는 원하지만, 이주노동자 조직화에는 냉담한 것이다.

이렇듯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용기를 내어 투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회피를 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기회주의적 좌파는 앞에서 지적한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문제들을 비판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심지어 동조한다.

임금 인상과 재계약 보장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당면 요구를 온전히 지지하며 연대를 해야 한다.

정선영

고 하청 비정규직을 대거 늘려 온 것은 이주노동자가 조선업에 유입되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정규직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것도, 이주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고용 불안을 강요하는 것도 사용자다. 자국민 채용을 우선하는 민족주의는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르는 노동자 단결을 가로막아 공동의 적인 사용자에 맞선 투쟁을 약화시킨다.

이주노동자들과 정주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 사용자를 물러서게 만들 때 이주노동자들과 정주노동자 모두의 임금과 고용을 개선할 가능성이 커진다.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사용자 측의 일부 양보에도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7월 5일 오후 2시 울산 HD현대중공업(이하 현중) 정문 앞에서 “나쁜 계약 철회를 위한” 전국이주노동자 공동행동대회가 열렸다. 현중 사용자에 맞서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이 벌인 네 번째 집단 행동이다.

현중 사용자 측은 원·하청 정주노동자와 하청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받지 않았던 식비를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에게만 많게는 50만 원 정도 공제해 왔다. 심각한 차별 대우였다. 특히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은 하청 이주노동자들도 받는 여름 및 명절 휴가비 그리고 연말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 또, 고용 불안에도 시달려 왔다. 지난해 직고용 이주노동자 100여 명이 계약해지됐다.

현중 사용자 측은 조삼모사식으로 불만을 달래려고 했다.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되, 기본급 및 수당을 합쳐 약 20만 원 삭감, 연 2회 인사 평가 후 기본급 차등 인상, 성과급 차등 지급, 저평가자 해고 등 저임금과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새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것이다. 그러자 이주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첫 번째 집단 행동에는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만 200여 명이 모였다. 2차 집회에는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 합쳐 300명이 넘었고, 3차 집회 때는 더 확대돼 4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3차 집회에서는 스리랑카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이주노동자들

외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도 참가해 행동이 확대됐다.

이주노동자들이 집단 행동을 하자 현중 사용자 측은 압박을 꺾나 받은 것으로 보인다. 3차 집회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이 새 근로계약서 서명을 강요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러자 사용자 측은 국적별로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 간담회를 열어 강제가 아닌 자발적 서명이라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한다. 7월 5일 집회 때 사회자는 스리랑카인 노동자 200명이 그 서명을 거부했다고 보고했다.

사용자 측은 4차 집회 직전에 일부 양보안을 내놨다. 직고용 이주노동자에게서 공제해 왔던 식사비를 2023년

1월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돌려 주기로 했다고 한다. 성과급도 인사 평가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사용자 측은 근로계약서 개악안은 철회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집회가 열렸다.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전국에서 연대하기 위한 동지들이 10여 대의 버스와 여러 대의 승합차를 타고 집회장에 왔다. 선두에서 투쟁하는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수백 명이 단단하게 뭉쳐서 왔고 다른 국적의 노동자들도 참가했다.

집회는 매우 활기찼다. 여러 이주노동자들이 집회에 사람이 많이 와서 좋으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구호를 외

칠 때는 귀가 아플 정도로 우렁찼다.

현중 스리랑카인 이주노동자 대표인 차리타 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회사가 아직 안 해 줬다. 나쁜 계약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연설했다. 사용자의 일부 양보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 준 것이다.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노동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양보를 얻어 내려면 투쟁이 더 확대돼야 한다.

정주노동자들의 연대도 이뤄지고 있다. 80여 명의 정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연서명에 동참했고, 지난 7월 2일 출근 시간에 이주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홍보전을 진행했다.

노조 가입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뺨뺨이 돌리는 현중노조 집행부

투쟁하고 있는 현중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현중지부 집행부는 이주노동자들을 하청지회에 가입시키고 있다. 이 이주노동자들은 계약직이긴 하지만 ‘직고용’이고, 하청업체로의 이직

이 예정된 것도 아닌데 말이다.

노조 집행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질의한 나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이주노동자들이 현중 노조에 가입한다 한들 단협 적용 못 받고, 직고용 계약직 정주노동자들도 노조 가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생기는 등

노노 갈등으로 단결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금속노조 직가입을 추진하다가 하청지회에 제안했고 하청지회가 수락했다.

현중지부 집행부가 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결국 하청지회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중지부 집행부의 답변은 구차하다. 직고용 계약직 정주노동자들이 아직 노조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투쟁하는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을 먼저 가입시키고 투쟁을 더 확대해 직고용 계약직 정주노동자들도 가입하